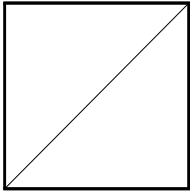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25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2. 13. (제 3 차)	

(주)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용 범
제출 연월일	2019. 2. 13.

1. 의결주문

(주)참저축은행의 제41기(2014.7.1.~2015.6.3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참저축은행의 제41기(2014.7.1.~2015.6.3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참저축은행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5.6월말 10,456백만원) ○ 미수수익 과대계상 ('15.6월말 78백만원)
조치 내용 *1,*2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회사 및 前 대표이사 000)

※ 담당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위법행위에 공모한 사실을 감안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기 퇴임한('16.1.5.) 前 대표이사 000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상 임원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1 동기판단 : 고의 또는 중과실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 고의 또는 중과실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前 대표이사 000 및 대주주 000, 000이 공모하여 위조증권 및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였으므로,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7)]

- (장기연체상태 등) 연체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고 타금융기관의 선순위 전액담보설정 등으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대출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달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므로 ‘중과실’로 판단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1)]

○ 미수수익 과대계상 : 중과실

- 타금융기관의 연체정보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이미 등록된 차주의 채권에 대해,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수수익을 78백만원 계상하였으므로 ‘중과실’로 판단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1)]

*2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사유 : 없음(위법행위로 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가중사유 없음)
- 감경사유 : 없음

*3 검찰 통보·고발 관련 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해 기소('16.7.18.)되어 회사, 대주주 000, 000 및 前 대표이사 000 등이 벌금 또는 실형 등을 선고 ('18.9.20.)받은 사실을 검찰통보시 부기

4. 참고사항

가. 제16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18.12.27.)

- 원안대로 심의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주)참저축은행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참저축은행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0 0000 00

☐ (주)참저축은행의 前 대표이사 000

- 생년월일 : 0000.00.00
- 주 소 : 000 000 0000 0000 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주)참저축은행은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부터 2020회계연도(2020.1.1~2020.12.31.)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참저축은행은 조치일로부터 8개월(2019.2.13.~2019.10.12.)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참저축은행 및 前 대표이사 000을 각각 검찰에 통보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참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제41기(2014.7.1.~2015.6.30.)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15년 6월말 10,456백만원)
 -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위반하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10,456백만원 과소계상함
 - 미수수익 과대계상 ('15년 6월말, 78백만원)
 - 연체 등으로 신용도판단정보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744개 차주의 채권에 대해 대출이자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미수수익을 78백만원 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15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업무를 할 때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에 대한 건전성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별표7> 및 <별표7-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고,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회계기준 등)

-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 감독규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4>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붙임1)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삭제>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생 략>

③ ~ ⑦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외부감사대상제외) 영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2.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3.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4.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5.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7. 위 제2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당해 회사

제48조 (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 4. <생 략>
- ② ~ ③ <생 략>

제52조(감리결과 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 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생 략>

② ~ ③ <삭 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 5. <생 략>

②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이 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고발등) ①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 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 ② <생 략>

③ <삭 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 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 ③ <생 략>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 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 및 삼일회(이하 이 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삼일회의 경우 지급준비에탁금회계에 한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확정지급보증

②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분류대상자산중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차주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외의 분류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취급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단위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⑦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 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⑩ 제9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담보에 대한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 총 대출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4. 대출채권의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⑪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회계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 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④ <생략>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삭 제>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관련자산 아파트) 또는 100분의 10이상 (관련자산 아파트 이외)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 6. <생 략>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생 략>

② ~ ④ <생 략>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I. 여 신

1.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가. 상호저축은행은 거래기업의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따른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중 보수적인 것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차주(시행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 ③ 삼일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경우

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분류기준은 <별표7-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가. 정 상

(1)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 및 2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다만,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 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여신을 포함한다.

(2) “연체여신”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여신
- ②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 ③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여신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예시>

- ①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 ②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다)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
- ③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에 대한 총여신. 다만, 고정이하 분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로 분류하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금액

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준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최직근 상호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회생채권으로서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여신

⑥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⑦ 최근 결산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기업의 총여신

⑧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

⑨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원리금의 연체 없이 기업개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 약정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동안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여신

⑩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부실징후 예시>

① 최근 3회계년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④ 경영권,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⑤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다.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① 4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에는 <예시> ①에 불구하고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회수예상가액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전 최직근 담보평가액(최종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2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1.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다만, 해당 상호저축은행 총여신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⑦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⑧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서 기업개선약정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⑨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은 제외한다)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신용공여(차명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신용공여(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이후 취급된 신용공여는 다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에 총 신용공여에 합산한다). 다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I. 2. 가. (2)에서 규정한 연체여신의 정의에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납입지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

	검사종료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검사종료일 현재 정상적 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고정이하 분류시점	검사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건전성분류기준일	건전성분류 기준일
건전성 분류시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	위의 고정이하 분류시점 ^{주)} 에 정상적 신 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한도초과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도 이내 는 정상으로 분류)하고, 그러하지 아니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 경우에는 총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	-------------------------	--

에 따라 분류한다.

주) 이후 매 건전성 분류시점에도 동일기준 적용

⑩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라.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예시>

- ①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 ② 법적 절차 완결 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 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
- ③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 ④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회계처리 세부기준

IV.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가. 수익보정

(1) 미수수익

(나) 결산일 현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거래처에 대한 모든 채권의 미수이자 는 보장하지 아니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7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6.17의2 :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회계감사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3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범위) 이 기준에 준거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이 기준, 관련 법규 및 감사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230 문서화

2. (감사조서의 형식과 내용)

2.1 감사인은 해당 감사에 대해 이해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충분하도록 완전하고 자세하게 감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감사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업무의 계획에 관한 사항
- (2)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3) 상기 사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 (4)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

310 사업에 대한 이해

- 1.2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업무 또는 감사보고서에 유의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거래 및 실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보유 또는 습득하여야 한다.
- 2.2 감사인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감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파악한 사항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제표의 경영자주장과 모순이 없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 1.2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2.1 감사인은 내부통제의 시사로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통제위험의 평가수준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2.2 감사인은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경영자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 2.3 감사인이 경영자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한정 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 2.9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유용성과 증거수집 비용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러나 관련 감사절차의 적용상 어려움과 소요비용을 이유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83	02-3145-7325